

■ 이 슈 진 단

국정감사... 건설부문 쟁점은 무엇인가

전 태 형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 19일 3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특히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 등 서민 민생고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각 분야 위원회마다 이를 주제로 한 세부 사안들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일찍 시작된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국감 준비가 예년보다 긴박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 여는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 역시 여당과 야당 간의 불필요한 정치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팍팍해진 민생 살림고와 관련된 국정 책임론에 대한 추궁에서 여야가 각론에서는 다르겠지만 총론에

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 등 건설 분야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4대강 문제가 쟁점 사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전세대란 문제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잇단 KTX 사고와 국토부 직원들의 비리 문제 등도 국감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효과 논란

MB정부 들어 해마다 국감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4대강 이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올해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피해 사

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홍수 피해를 막고자 했던 4대강의 치수 효과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시민 사회는 물론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최근 진행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가 오가고 위원장까지 고함을 지르는 등 한때 난장판이 될 정도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마로 인해 왜관철교, 상주댐 제방, 칠곡댐 시설 붕괴, 구미 지역 단수 사태 등 4대강 전역에서 인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나 여당측은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줄었다”면서 4대강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폭우에도 전과 같은 큰 홍수 피해

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분명한 4대강 준설의 효과라는 것.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호국의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지목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할 태세다.

4대강 예산에 대한 논란도 국감을 달굴 이슈. 당초 4대강 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으로 알려진 규모는 22조 2,000억원. 본 사업비 16조 9,500억원에 지류 정비 및 수질 개선 사업 등 직접 연계 사업비 5조 2,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불과 3년여의 공사 기간에 들어가는 돈 치고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해 의심의 눈

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사실 야당은 줄곧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표적인 게 토지보상비 과소 책정 여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보다 토지 보상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산한 북한강·섬강 5개 공구 토지보상비(1,085억 2,000만원)가 국토부 발표(277억 9,0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상비가 당초 1조 5,482억원에서 2

조 4,499억원으로 급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실측 결과 보상 면적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점까지 감안하면 보상 단가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예산 규모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후속 예산들이다.

지난 4월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어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 5,500km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4대강 본류사업 예산과 맞먹는 약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전세대란을 놓고 정부의 안이했던 대처 방식과 약발 없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목소리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의 59.1%를 전세가가 차지할 정도. 집값이 1억원이면 이 가운데 전세가격이 5,910만원이란 얘기. 자고 나면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오른 만큼 월세를 내고 사는 이른바 '반전세' 비율도



올해 건설 분야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4대강 문제와 함께 주택 정책에 대한 이슈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슈 진 단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올 들어서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졌고, 이중 전월세 대책만 세 번이나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태. 여기엔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이하게 진단했던 정부의 책임도 큰 만큼 여야 의원들의 정부 책임 추궁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시장의 오래된 외침에도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다”,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난도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방치하면서 시장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여야 의원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정부의 좁은 시각을 추궁할 전망이다.

잇따라 쏟아졌던 전세 대책 역시 집 부자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만 덜어줄 뿐, 정작 전세난을 겪고 있는 3~4인 서민 가구의 부족한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1~2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월세용 임대주택 공급에만 효과가 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3~4인 가구의 전세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민간 특혜 의혹'

LH공사가 주도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민간 건설사의 참여로까지 확대된 것을 놓고 LH의 부실을 핑계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특혜를 준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해 도시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까지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히,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에서도 민간에 택지를 헐값으로 매각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건 명백한 특혜라는 설 명이다.

비건설 분야도 산적

건설 분야는 아니지만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작업과 잇단 국토부 직원의 비리 문제, 연이은 KTX의 사고 등도 국토해양위가 따져 물을 쟁점사안들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놓고서는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 건설 예산을 공사 지분을 팔아 메우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은 “국토부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5,909억원을 매각대금 예상액으로 잡아 미리 도로 건설 예산에 편성했다”며, “하지만 지분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앞서 주장하기도 했다.

‘사고철’이란 오명을 쓰게 된 KTX의 안전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코레일이 KTX 안전 확보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열차 운영 주체인 코레일과 철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책임 추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로 적발된 국토부 직원들의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가 드러난 직원 15명 가운데 1명만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론을 내고 조치를 마무리한 것이 추궁 대목이다.

한편, 일정에서 빠진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약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달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뉴타운 사업과 전월세 대책, 보금자리주택의 제도적 미비점, 경인아라뱃길,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등이 거론되었다. 